

오키나와

- 미국과 일본의 이중 식민지 오키나와의 비극

-임영태

관광지가 된 수난의 섬 오키나와

오키나와(沖縄)는 오사카, 도쿄 등과 함께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본 관광지 중 하나다. 오사카는 한국에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탓에, 또 도쿄는 일본의 수도이자 선진국 일본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곳이기때문에, 그리고 오키나와는 따뜻한 날씨와 함께 아름다운 태평양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일반적으로 오키나와는 오키나와현에 속하는 여러 섬들 가운데 중심이 되는 가장 큰 섬을 말한다.¹⁾ 오키나와 제도의 경우 북부지역은 온대, 남부지역은 열대에 속하는 기후대를 갖고 있지만 사철의 변화가 크지 않은 온난한 기후 덕분에 천혜의 자연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동남아 등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이다.

보통 사람에게는 관광지이면서 미군기지가 있는 정도로만 알려진 이 오키나와는 기구한 역사를 가진 수난의 섬이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일본이 아닌 곳, 흔히 하는 말로 ‘일본의 내부 식민지’ 같은 그런 곳이다. 그 때문에 오키나와가 종종 한국의 제주도와 비견되기도 한다. 제주도는 고대 탐라국이 있었으나 신라에 병합된 뒤부터 육지의 수탈대상이 되었다. 고려 말에는 몽골의 침략과 항쟁, 또 일본 정벌을 위한 기지이자 말 목장으로써, 조선시대에는 조정에 바쳐야 할 진상품 공급 때문에 술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근대 이전의 그 어떤 시련도 3만 명 이상의 제주사람들이 폐죽음을 당한 1948년 제주4.3사건의 비극과 비교하면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오키나와의 비극은 한반도에서 수난의 땅으로 불리는 제주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오키나와는 근대 이전까지 류큐(琉球)왕국이 지배하던 곳이다. 10세기경부터 오키나와에 부족국가가 출현했으며, 안사(按司)라고 불리는 족장들이 여러 지역을 분할 지배했다. 12세기경 부족들이 병합되면서 오키나와 섬에는 산남(山南), 중산(中山), 산북(山北)의 세 왕조가 들어서 삼국시대가 열렸다. 중산국의 왕 파지(巴志)는 1416년 북쪽의 산북왕국을 정복했고, 1429년에는 남쪽의 산남왕국까지 정복해 삼국을 통일했다. 슈리(首里)성을 수도로 정한 류큐왕국((琉球國)은 명나라에 조공하며 관계를 맺었

1) 현재 일본 오키나와현은 류슈 가고시마현에서 대만 사이에 여러 섬들이 활처럼 휘어져 있어서 류큐호(弧)라고도 하는데, 오키나와, 다이도, 미야코, 야에야마, 그리고 중국과의 분쟁지인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등 14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면적은 2,266km²로 우리나라 제주도(1,847km²)보다 약간 넓다. 오키나와현의 해역 넓이는 일본 관할수역의 30%를 넘어서 해상 면적이 일본 육지면적의 1.1배나 된다. 군사기지를 갖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 대륙을 활처럼 포위하고 있는 항공모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다. 명나라 선종은 파지에게 상(尙)씨라는 성을 내렸다. 조선 세종임금 때였다. 류큐왕국은 중국의 조공국이었으나 당시 일본에는 독립적이었다. 당시 일본은 각지의 유력자들이 다투던 전국시대여서 류큐에 손을 댈 여력이 없었다. 류큐왕국은 중국과 일본, 조선을 비롯해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 중개무역을 하면서 국부를 축적했고 문화가 크게 발전했다.

1587년 규슈를 평정하고 일본을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인 1591년 8월 사쓰마번(지금의 가고시마)을 장악하고 있던 시마즈(島津)가문에게 조선 침략을 위해 1만5,000명의 군역 부담을 명령했다. 그러자 시마즈는 류큐왕국에게 7,500명이 10개월간 먹을 군량미 1만1,250석과 황금 8,000냥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류큐왕은 이를 거부하고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토요토미의 조선침략 계획을 알렸다. 임진왜란 이듬해인 1593년 사쓰마번은 류큐 사신을 억류하고 군사 7,000명의 10개월치 식량과 류큐열도 북쪽 5개 섬을 사쓰마에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류큐왕국은 이 또한 거절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새 막부가 열렸다. 1609년 3월 사쓰마의 다이묘는 도쿠가와와의 승인을 받아 3,000명의 병력과 선박 80척을 동원해 류큐왕국을 침략했다. 임진왜란 때 협조를 거부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4월 5일 수도 슈리성이 점령되고, 류큐 국왕과 100명의 고관들이 사쓰마번으로 납치되었다. 복종을 거부한 총신은 펄펄 끓는 기름 솥에 던져졌다. 왕과 신하들은 도쿠가와에 대한 복종을 서약하고 2년 6개월만에 풀려났다. 사쓰마번은 그 후 류큐왕국의 수도 슈리성에 감독관을 보내 내정에 간섭했다.

그리고 북부 5개 섬을 사쓰마번에 할양했다. 지금 류큐 제도의 북단 5개 섬이 가고시마현에 속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때부터 류큐왕국은 중국과 일본에 조공하는 이종속국으로 전락했다. 이후 일본은 류큐인들이 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금지했고, 오키나와는 '비무(非武)'의 섬이 되었다. 류큐인들은 무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중국 남권을 변형한 당수(唐手)를 연마하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공수(空手), 즉 가라데로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태권도는 이 공수(가라데)에서 유래하였다.²⁾

2) 오늘날 한국에서는 태권도가 우리 고유의 것임을 강조하여 오래된 전통무술인 '택권'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공수도(가라데)를 습득한 이들이 새롭게 변형하여 만든 것이 태권도라는 주장이 역사가들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태권도를 만든 사람들 중에는 일본의 공수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고, 중국 무술에 능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근거로 공수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태권도는 가라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세나 행동 등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발차기 기술이 중심을 이루는 등 한국에서 새롭게 만든 내용이 많이 있어서 새로운 한국무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의 유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전혀 다른 무술로 발전한 브라질의 주짓수처럼 말이다. 한국의 태권도 창시자로 알려진 최홍희는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 시절 당수(가라데)를 배웠고 학병 출신으로 평양학병 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해방 후 미군정 시기 군사영어학교를 나와 국방경비대(한국군의 전신) 창설에 참여, 군에 근무하던 중 사병들이 경찰에게 맞고 오는 일이 잦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군인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무술 교육을 실시했다. 미군정기 국방경비대는 군대가 아니라 폭동진압 등 친일경찰 중심의 경찰을 보조하는 무장력으로 출발했고, 그 때문에 장비나 훈련 등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초기 좌익 출신들도 입대가 비교적 쉬웠던 국방경비대는 친일경찰에 대한 반감이 컸는데, 경찰은 이런 경비대 사병들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대했던 것이다.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순항쟁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친일경찰 타도였던 점을 생각하면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53년 최홍희가 29사단장으로 부임한 뒤 군인들에게 태권도 교육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오키나와의 눈물

1868년 일본 메이지유신의 주역이 류큐왕국에 가장 가까운 큐슈 사쓰마번 출신들이었던 것이 비극이라면 비극이었다. 가고시마 무사 출신의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는 같은 지역 출신으로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를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한 다음 류큐 병탄을 강력히 주장했다. 1872년 오쿠보는 류큐국왕을 메이지유신 축하사절단으로 도쿄로 불러들여 류큐국왕에게 일본 귀족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칙서를 내리고, 류큐를 일본 외무성 관할 아래에 둔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1875년 오쿠보는 외무대신 마쓰다 미츠유키(松田道之)를 류큐에 파견해 청나라에 대한 조공을 금지할 것과 미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와 맺은 외교관계를 단절하라고 강요했다. 왕국의 운명이 경각에 놓인 류큐국왕은 임세공(任世功) 등 3명의 밀사를 청나라에 보내 원조를 요청했다.

3인의 밀사는 류큐 국왕의 친서를 중국 황제에게 올리고, 당시 청나라 실세였던 이홍장(李鴻章)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청의 주일공사 하여장(何如章)은 류큐에 함대를 파견해 무력으로 일본을 축출하자고 강경론을 폈지만, 이홍장은 몇 개의 섬을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다며 외면했다. 철석 같이 믿었던 종주국 청의 거절에 밀사들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들은 이홍장 관저 앞에 꿇어 앉아 “류큐 신민으로 살아도 일본인으로 살수 없다. 대청제국은 조속히 출병해 류큐를 구해 달라”는 내용의 혈서를 썼다. 그러나 이홍장 관저의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홍장을 만나지 못한 임세공은 남동쪽 류큐 왕궁을 향해 세 번 절한 후 비수로 심장을 찔러 자결했다.³⁾

1907년 조선에서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 고종 황제를 퇴위시킨 바 있는 일본은 앞서 이미 류큐에서 그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청나라에 밀사를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일본은 류큐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1879년 3월 27일 일본 정부는 500명의 병력을 류큐로 급파해 슈리성을 무력 점령했으며, 4월 4일 류큐번을 폐지하고 오키나와현을 둔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류큐의 마지막 왕 쇼타이(尚泰)를 폐위시키고 도쿄로 압송해 유폐시켰다. 이로써 류큐왕국은 450년만에 역사에서 사라졌으며 류큐인들의 수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429년 삼국을 통일한 뒤 류큐왕국은 450년 동안 번성을 누렸다. 중국과 일본에 동시에 조공을 바치면서 부를 축적하고 문화를 발전시켰던 류큐왕국은 1879년 이른바 일본의 ‘처분(處分)’을 받아 오키나와 현으로 강제 편입되었다.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독립 왕국으로 존재해왔던 류큐는 일본에 합병된 뒤 고유의 말과 문화를 포기하고 일본제국의 일원이 될 것을 강요받았다.

실시하면서 한국의 태권도가 출발되었다.

3) 임세공은 자결 직전 다음과 같은 절명시를 남겼다.(오에 겐자부로, 『오키나와 노트』, 74쪽 재인용)
예로부터 지금까지 충효를 다한 사람이 몇이나 되리오./ 나라를 걱정하고 가정을 생각하느라 벌써 다섯 해가 흘렀다오./ 이제는 목숨을 바쳐 국가의 존속을 기대할 수밖에 없으니/ 부모님이시여, 현명한 형제들을 의지해 주소서.(古來忠孝幾人全/ 憂國思家已五年/ 一死猶期存社稷/ 高堂專賴弟兄賢)

태평양 전쟁 막바지 일제는 오키나와를 본토 사수를 위한 방패막이로 생각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주민의 3분의 1인 12만 명이 희생되었다. 섬 전체가 엄청난 참화를 겪어야 했고 오키나와 사람들은 깊은 전쟁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 이 같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오키나와 사람들은 전쟁 없는 평화를 갈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은 오랫동안 오키나와 섬을 점령하며 군사기지를 구축했다. 일본이 오키나와를 천황제 사수를 위해 미국에 뇌물로 제공했던 것이다. 오키나와는 1972년 일본에 되돌려지기 전까지 미국이 점령한 군사식민지가 되었다. 그때까지 오키나와인은 미국인도 일본인도 아니었다.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면서 미군기지에 강제로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이었다.

냉전 시기 오키나와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군사기지 역할을 했다. 1972년 미국이 일본에 통치권을 넘겨준 뒤에도 오키나와의 이런 지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그대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에서 철수하는 전력도 이곳에 재배치되었다. 이런 일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뉴욕과 도쿄의 일방적인 협약에 의해서 이뤄졌다. 오키나와는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중 식민지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내부 식민지로서 본토 대신 미국에 제공된 희생양, 제물이었다. 일본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 현에 주일미군기지의 76%가 존재하고 오키나와 섬 전체의 20%를 미군기지가 차지하게 되었다.

냉전은 끝났지만 오키나와의 희생은 계속되었다. 주민들은 군사기지 없는 평화의 땅에서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무너진 뒤에도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군사기지 오키나와는 여전히 필요했다. 21세기에는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 전략'(또는 '재균형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키나와는 여전히 중요한 곳이 되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평화헌법을 버리고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 최대의 염원인 일본 우익에게 오키나와는 여전히 미국을 달래는 뇌물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일본이 보통국가가 되면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의 맹주로서 중국과 대항하기 위한 군사기지로서 오키나와는 여전히 그 존재가 요구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은 전쟁과 군대 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을 마련했다. 천황제 유지를 조건으로 이룬 타협점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의 패권이 위협받게 되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전면내세우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로 바뀌도록 지원하기로 작정했고, 이제 그 마지막 문턱에 와 있다. 이것은 과거 침략전쟁을 벌였던 전쟁국가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오키나와는 여전히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요충지가 되고 있다. 설령 미군이 떠나더라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의 핵심군사전력이 배치될 지역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오키나와의 눈물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

난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패전 일본의 제물이 된 오키나와의 운명

류큐왕국의 병합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출발점이었다. 그것은 일본이 군국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다. 1879년 류큐왕국을 병탄한 일본은 다음에 대만(타이완)에 손길을 뻗었으며,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 대만과 팽호(평후)열도를 전리품으로 챙겼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해 1910년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1931년에는 9.18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장악했으며 1937년 루거우차오(盧溝橋) 사건과 함께 중국 침략을 본격화했다. 중일전쟁과 함께 일본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중국의 많은 도시지역과 연안지역을 점령했음에도 거대한 중국 대륙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중국의 항일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일본군은 더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

수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던 일본의 다음 행보는 중국과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전략 물자가 있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것밖에 없었다. 일본의 전선 확대는 동남아와 태평양에서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미국·영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미국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던 석유금수조치로써 일본의 목줄을 죄어오자 일본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941년 12월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면서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선전포고 없는 기습적인 선제공격으로 상대방을 초전에 박살냄으로써 조기에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은 일본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에서 모두 이런 수법을 써먹었다. 태평양전쟁에서도 동일한 수법이 동원되었다. 앞선 세 전쟁, 그러니까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에서는 일본의 의도가 성공했다. 하지만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에서는 그게 먹히지 않았다.

중국은 그들이 늘상 자랑하는 것처럼 ‘광대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로써 아편전쟁 이후 서세동점의 과정에서 서구 열강들에게 참혹한 패배를 경험했지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다. 일본이 신흥강국으로써 ‘육일승천’하고 있었다고 해도 중국 대륙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938년 후반 광둥 지역 점령 이후 중국 전선에서 일본군은 더 이상 내륙지역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충칭으로 수도를 옮긴 장제스 정부는 대일전선을 정비하는 한편,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손을 잡고 국공합작을 이룸으로써 중국내의 모든 항일역량이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로써 중일 전쟁의 판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초강대국의 잠재력을 갖고 있던 미국은 일본이 쉽사리 넘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다. 기습공격으로 미국의 태평양 함대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지만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전력을 회복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일본과의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자 판세는 금방 뒤집어졌다. 1942년 6월 3~6일에 걸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이 되었다. 일본의 야마모토

제독은 미국의 나머지 태평양 함대를 이곳에서 섬멸하고자 했으나 미국의 전력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무적 황군의 신화가 깨지면서 이후 일본의 패배가 계속되었다.

1942년 8월 7일 미 해병대는 과달카날 섬에 상륙하기 시작해 1943년 2월 9일 일본군의 마지막 저항 거점을 점령했다. 1943년 중반 미군 측은 대규모 공세를 전개하기에 충분한 병력을 확보했고, 이후 미군은 공격하고 일본은 방어하는 전투 양상이 계속되었다. 1944년 7월 마침내 싸이판이 함락되었다. 다음은 차례는 레이테 섬, 그리고 오키나와였다. 오키나와가 점령되면 바로 일본 본토였다.

일본군 대본영 통합참모본부는 연합군(미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오키나와 방어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류큐의 여러 섬들에서 여성, 어린이, 노약자를 소개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계획은 많은 차질을 빚었다. 주민들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걱정했다. 더욱이 미군 잠수함이 출몰할 가능성이 있는 항로를 가로질러 가야 하는 위험한 계획이었다.

8월 22일, 1,788명(학생 834명, 교사와 성인 827명, 선원 127명)을 태운 쓰시마루(對馬丸)호가 일본 본토 최남단 항구 가고시마를 향해 출발했다. 그러나 쓰시마루호는 미군 잠수함 보핀(USS Bowfin)의 어뢰 공격을 받고 곧 침몰했다. 1,418명이 사망했다. 오키나와 최초의 민간인 대량학살이었다. 오키나와 전투가 시작되기 전 겨우 10만 명의 오키나와인만이 피난을 할 수 있었다. 나머지 40만 명은 도망칠 곳도 없는 섬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10월 10일, 미군의 공중폭격으로 오키나와 현의 주도인 나하시의 90%가 파괴되었고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668명이 사망했다. 미군은 군사시설은 물론 항만, 도로, 촌락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며 다음에 전개될 오키나와 상륙 전투에 대비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인들에게 “군대·정부·민간인은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것은 모든 오키나와인의 ‘옥쇄(玉碎)’, 곧 ‘죽음’을 요구한 것이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오키나와 전투의 희생자가 된 민간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의 모든 인민을 희생시킴으로써 본토를 사수하고 국체(國體), 즉 천황제를 지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이다. 오키나와는 일본을 지키는 방파제이며 천황제를 사수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 오키나와는, 오키나와의 모든 인민은 패배를 앞둔 일본의 제물(祭物)이 될 운명이 놓인 것이었다.

오키나와 전투와 전쟁의 트라우마

1945년 2월, 일왕 히로히토의 측근 코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는 ‘조기화평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히로히토는 “한 번 더 전과를 거두고 난 뒤가 아니면 어렵다”고 말했다. 미군에 큰 타격을 준 다음 항복(협상)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뜻이었다. 일본 왕의 이런 결정은 결국 50만 명의 일본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원인이 되

었다. 오키나와 희생자 12만 명을 포함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등 50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그것이다.

1945년 3월 23일의 공습과 다음날의 해상포격에 이어, 3월 26일 미군은 오키나와 현도 나하(那覇)시에서 서쪽으로 40킬로미터 떨어진 케라마(慶良間)제도에 상륙했다. 오키나와 전투가 시작되자 일본군 장교들은 고립되어 공포에 질린 주민들에게 집단자결을 강요했다. 미군에 항복하는 대신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일본군은 항복한 오키나와인들이 미군의 스파이가 될지 모른다고 두려워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인들이 황국신민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오키나와인들을 믿지 않았다.

일본군은 주민들에게 항복은 수치스러운 짓이며 남자는 학살되고 여자는 강간당한 후 살해될 것이라고 세뇌시켰다. 주민들에게 수류탄이 배급되었다. 수류탄이 모자란 경우에는 밧줄, 칼, 낫, 면도칼, 돌 등이 이용되었다. 강제적인 집단자결은 일본에 의해 '옥쇄'로 불려졌다. 3월 26~28일 케라마제도에서는 수백 명의 주민이 이런 식의 죽음에 내몰렸다. 강제집단사는 3월 26일부터 6월 21일까지 사이에 일어났고 알려진 학살 현장만 30곳이나 됐다. 사건 규모는 몇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집단자살 명령을 거부하는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의 총검에 살해되었다.

4월 1일, 미군은 오키나와 본도 중부의 요미탄(讀谷)과 차탄(北谷) 사이에 있는 서해안에 상륙한 다음, 각각 북쪽과 남쪽을 향해 진격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군의 기본 전략은 미군의 본토 공격을 지연시키는 데 맞춰졌다. 일본군은 상륙지점에서의 전투를 피하고 지구전을 폈고, 그 덕분에 미군은 섬에 '무혈상륙'할 수 있었다. 일본군은 남은 공격력을 큐슈(九州)와 대만의 기지로 돌려 2천여 회의 '카미카제 특공대'로 미군 전함에 자살 공격을 감행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은 1,400~1,500여척의 전함과 18만 3천명의 상륙부대와 호위부대를 포함하여 모두 54만 8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반면, 미군에 대항하는 일본군의 병력은 약 10만 명(육군 69,000~86,400명과 해군 8,000~10,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일본군은 13세에서 70세까지의 주민들을 방위대, 의용대로 총동원했다. 중등학교 학생과 여자 구호반, 취사반까지 포함해 11~12만 명의 주민이 동원되었다. 미군은 병력뿐만 아니라 장비에서도 일본군을 압도했다. 제해권과 제공권은 미군이 완전히 장악했다.

4월 8일, 미군은 일본군의 저지선과 처음으로 마주했다. 미군은 이후 일본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전선을 돌파하는 데 50여일이나 소요했고, 5월 11일에야 일본군 사령부가 있던 슈리(首里)에 대한 공격을 펼칠 수 있었다. 일본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전력의 70% 이상을 상실한 채 5월 말 남쪽으로 도망쳤다. 제32군 사령관 우시지마 미쓰루는 남부의 마부니 언덕에 새 사령부를 설치하고 남은 3만여 명의 병력을 끌어 모아 전투를 계속했다.

일본의 전쟁지도부인大本영은 오키나와를 단지 본토 사수를 위한 '방파제', '사석(捨石)'으로만 보았을 뿐이었다. 천황제를 유지하면서 평화협상에 나설 수 있는 시간

을 벌어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류큐신문>(2005.4.1)은 “일본의 패전은 필연’이라는 인식하에 싸워야 했던 오키나와 전투는 미국과 일본의 마지막 지상전이였다. 오키나와 주민에게는 전후사의 ‘고뇌와 굴욕의 원점’이 되었다. 10만여 오키나와 수비군의 임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본토침공’을 막기 위해 지구전으로 버티는 것이었다. 절체절명이 당면과제인 천황제 유지를 위해서는 본토 결전 준비와 종전 교섭시간을 벌여야만 했다. 오키나와 수비군은 오키나와 현에 ‘군민공생공사(軍民共生共死)의 일체화’를 지시하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전력화해야 할 것’이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쟁에 동원했다”⁴⁾라고 썼다.

오키나와 남부의 일본군은 대본영의 이러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 남쪽 퇴로에 위치한 이 지역에는 수많은 여성, 어린이, 노인들이 피난해 있었고, 일본군은 이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했다. 오키나와인들은 군대가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공격에 대한 방패막이로 내세우거나 자살을 강요하며 때로는 직접 살해하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다.

오키나와 섬 남부에서 지역 주민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회암 동굴인 가마(ガマ)를 피난처로 택했다. 중부에서 후퇴해온 일본군은 이 동굴을 차지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내쫓아 죽음 속으로 몰아넣었다. 미군의 집중 포격과 공습, 화염방사기의 목표물이 된 일본군 부대와 나하, 슈리, 오키나와 중부에서 피난해온 민간이 뒤섞이면서 이곳 남부는 혼돈의 장이 되었다. 미군의 공격은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았다. 미군은 가마에 숨은 일본군을 죽이기 위해 동굴 입구에서 폭발물을 던져 넣거나 화염방사기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무차별적으로 희생되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을 전쟁에 동원하고 방패막이로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말(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을 스파이로 간주하며 살해했다. 특히 마을에서 군과 접촉이 많았던 촌장이나 구장, 경방단장, 교장 등이 스파이 혐의로 크게 위협받았다. 우연히 일본군 진지 옆을 지나가거나 일본군의 지시를 거역하거나, 표준어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 주민들도 스파이 혐의로 죽어갔다. 아쿠타가와상 수상 작가 메도루마 슌의 아버지는 ‘철혈군황대(鐵血勤皇隊)’란 이름으로 열 네 살의 어린나이에 오키나와 전투에 동원되었다. 소년은 목숨을 걸고 일본군 병사를 위해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구해주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소년 때문에 자신들이 미군에 발각될지도 모른다면 목숨을 걸고 먹거리를 주해다 주던 소년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그런 사실을 감지한 그는 그 길로 일본군으로부터 도망쳐 살아남을 수 있었다.

6월 22일 제32군 사령관 우시지마 중장과 그의 참모장 초오 이사무가 자결하면서 일본군의 조직적인 작전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우시지마의 마지막 명령은 마지막까지 싸우라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이후에도 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 죽었다. 오키나와 남부의 오로쿠(小祿)반도를 방어하고 있던 일본해군 사령관 오오따미노루(大田實) 또한 6월 13일 해군의 지하사령부에서 자결했다. 그는 죽으면서 오키나와 현민들이 최선을 다해 싸웠다면 “후세에 특별한 고려를 해주기를” 요청하는

4) 메도루마 슌, 『오키나와의 눈물』, 19쪽 재인용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당시 오키나와에는 식민지 조선에서 징용되어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군부(軍夫)’라는 이름으로 비행장이나 진지 건설, 탄약 수송, 항구 하역 등에 동원되었다.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허울 좋은 구호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은 심각하게 차별받았다. 가혹한 노동환경과 열악한 처우로 영영실조에 걸려 조선인 사망자가 속출했다. 당시 카라마제도의 아까지마에 군부로 있었던 한 사람은 “너무 배가 고파서 들판에 있던 벼와 감자를 뜯어서 먹었는데, 그 때문에 많은 동료들이 총살당했다”라고 증언했다.

1975년에 건립된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 안의 조선인 위령탑에는 ‘1만여 명의 조선인이 전사하거나 학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1995년에 건립된 ‘평화의 초석’에 이름이 새겨진 조선인은 447명에 불과했다. 1999년 6월 2,815명의 조선인 노동자 명단이 한국에서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650명만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고, 273명은 사망이 확인되었다. 1,872명은 “미확인 상태로, 아마도 전쟁과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노동자의 70%가 전쟁 동안 죽거나 실종된 셈이다. 당시 오키나와에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있었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지는 아직도 확인할 수가 없다.

일본군이 가는 곳마다 이른바 ‘위안부’가 있었다. 조선, 일본,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차출된 수천 명의 여성들이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다. 오키나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오키나와 본섬과 주변 섬들을 포함해서 130여개가 넘는 위안소가 있었다. 그곳에는 조선인 여성 수백 명이 ‘위안부’로 끌려와 있었다. 철혈근황대원이었던 오오따 마사히데는 “오키나와의 경우, 슈리성의 지하사령부에는 ‘조센삐’라고 불리면서 차별받던 여성들이 20~30명 정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들 ‘위안부’ 여성들도 일본군에게 살해당하거나 자살을 강요받았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의 공습과 말라리아 감염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들은 전투 개시 직후부터 일본군이 항복한 뒤에도 미군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오키나와 전투가 시작된 3월 27일부터 6월말까지 10,740명(군인 7,401명과 노무자 3,339명)이 전쟁포로가 되었고, 285,272명의 민간인이 수용소에 구금되었다.

전쟁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오오따는 학우들이 “인간이 아니라 벌레처럼” 죽어가는 것을 거의 매일같이 보았다. 그의 동료학생 386명 중 226명이 전쟁에서 죽었다. 굶주림과 부상,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마부니 해안의 바위틈에 숨어서 전쟁의 마지막 몇 개월을 살아남았다. 그들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패배한 지 2개월 후인 1945년 10월 23일에 투항했고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수난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 시련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가 된 오키나와

오키나와 전투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 본토 결전을 준비하려 했던 일본은 끝내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오키나와는 1945년 6월 말경 미군에 의해 완전히 점령되었다. 그 얼마 뒤 미국의 원자탄 개발이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은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되었다. 독일과의 전쟁을 끝낸 뒤 숨을 돌리고 있던 소련군도 8월 8일부터 대일전에 나섰다.

일본은 더 이상 버티다가는 어떤 참화를 겪을지 알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연합국(미·소·중·영)에 의해 일본이 분할 점령될 수도 있고, 국체보존(천황제 유지)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할지도 몰랐다. 여전히 본토 사수를 위한 결전을 외치는 강경파들이 있었지만 항복파들은 8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연합 본부에 포츠담선언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보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 수락이었다. 그리고 8월 15일 천황의 항복 선언이 있었고, 9월 2일 도쿄만에 정박한 미 해군 전함 미주리(U.S.S 'Missouri', BB-63) 함상에서 항복문서가 조인되었다.

1945년 3월 말, 오키나와 전투가 시작되자 미태평양함대 사령관 체스트 W. 니미츠 제독은 오키나와 주변 남서제도의 섬들을 일본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일본의 공식적인 항복 선언과 전쟁 종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오키나와 단독점령을 계속되었다. 미 군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전략의 관점에서 오키나와를 군사적 요충지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패전 후 일본은 연합국의 군사적 점령 아래 놓이게 되었다. 대일점령통치의 형식상 최고기관은 1945년 12월 워싱턴에 설치된 미·영·중·소를 비롯한 13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Far Eastern Commission)였다. 원칙적으로는 연합국 측의 대일점령의 기본 방침은 극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것이 미국정부를 거쳐 연합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에 전해지면, GHQ는 미·영·중·소로 구성된 대일이사회(Allied Council for Japan)의 자문을 거쳐 일본 정부에 명령을 하달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극동위원회와 대일이사회는 실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GHQ와 GHQ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가 거의 전권을 행사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GHQ 참모에게 일본국헌법 초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때 맥아더는 '개헌 3원칙'을 제시했다. 그것은 "첫째, 일왕이 일본국의 정점에 위치할 것, 둘째, 일체의 군비와 전쟁의 포기, 셋째, 봉건제도 철폐" 등이었다. 일본 정부는 불만족스런 점이 없지 않았지만 결국 GHQ의 초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소련이 참가하는 극동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 천황의 지위가 위태로울 것이라는 GHQ의 암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렇게 해서 주권재민·상징천황제⁵⁾·전쟁포기⁶⁾를

5) 메이지헌법이 왕을 최고 권력을 지닌 '통치권자'로 규정하고 있었던 데 비해, 새로운 일본헌법은 왕의 지위와 관련하여 제1조에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제4조1항에서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종래에 부여되었던 통치권을 부정했다. 이처럼 '천황'의 지위를 '상징적인' 측면에서만 규정한 새로운 헌법은, '천황'도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에 의해서만 행위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함으로써 구헌법과 큰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천황'과 황실과 관련된 8개 조항이 제1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후 일본의 정치체제에서도 '천황'의 의미가 매우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규정한 헌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쟁범죄의 최고수령인 ‘천황’이 ‘전범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일본의 전쟁포기 규정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던 일본 제국주의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뽑아버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동아시아 지배전략의 파트너로서 친미적 중국(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을 상징하고 있던 전후 초기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천황’제 존속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는 주변 국가들의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천황’제 유지와 일본의 비무장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본의 비무장화는 오키나와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미국의 군사적 지배 아래 두면서 미군의 전략 거점으로 만드는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 맥아더는 일본이 오키나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통치를 장기간 허용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새헌법 제9조에 기초한 일본 본토의 비군사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맥아더는 1947년 6월 말, 도쿄를 방문한 미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오키나와를 미군이 지배하고 미 공군의 요새로 만들면, 일본이 비무장국가가 되더라도 (군사적) 진공지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맥아더의 이 발언에 호응이라도 하듯 그 해 9월, 일왕은 “미국이 (오키나와의) 주권을 일본에 남겨 두고, 조차(租借)하는 형식으로 25년 내지 50년 혹은 그 이상 오키나와를 지배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익도 된다”는 메시지를 GHQ에 전달했다.

1949년 초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오키나와를 장기 보유하려는 미 군부의 방침을 추진했다. 이미 중국 대륙에서는 마오쩌둥의 인민해방군이 장제스의 국민군을 몰아내고 있었고, 전세계적으로 미소의 냉전 대립도 심각해지고 있었다. 미국은 1949년 7월 처음으로 본격적인 오키나와 기지 건설 예산을 책정하였다. 7월 4일, 맥아더 사령관은 “일본은 공산주의 진출 저지의 방벽”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세계정세가 급변하면서 비무장국가 일본을 ‘반공 방벽’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가속화했다.

먼저 1950년 8월 10일 ‘경찰예비대’령(令)이 공포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의 재군비에 부정적이었던 맥아더도 미국의 전략을 보완할 현지 지상병력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경찰예비대는 2년 후 보안대로, 다시 그 2년 뒤 자위대로 바뀌었다. 다음으로는 미군의 항구적인 일본 주둔이었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전략상 공격기지, 후방지원기지로써 일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한편 한국전쟁은 ‘조선특수’라는 말로 상징되는 것처럼 일본의 경제적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적 이익과 미

6) 일본 헌법의 전쟁포기 규정은 크게 전문과 제9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전문에서는 “일본 국민은 …정부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기를 결의하며…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한다”는 평화주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제9조에서는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회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의 전쟁에 협력함으로써 얻게 되는 일본의 경제적 이익 사이의 상호관계를 토대로 하여 미일동맹이 발족하게 되었다. 동시에 오키나와를 비롯하여 일본 본토에 주둔한 미군도 계속 남게 되었다.

특히 오키나와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미국의 “태평양의 요석”(Keystone of the Pacific)으로 바뀌었다. 냉전 시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미국의 최고 군사기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 본토는 헌법상 ‘평화국가’가 되었으나 오키나와는 ‘전쟁국가’ ‘전쟁기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와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냉전기제국 속에서 상징적인 형태로 결합되었다. 일본 본토에 대한 미국의 점령은 1952년에 종식되었고, 류큐제도 최북단에 위치한 아마미의 경우는 1953년 12월에 미군 점령이 끝났다. 그러나 오키나와 부근의 섬들과 미야꼬, 야에야마제도에 대한 미군의 점령은 1972년까지 지속되었다.

1972년 이 섬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배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시정권(施政權)⁷⁾이 일본에 반환되면서 중국풍의 류큐라는 이름은 일본식의 오키나와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외관과는 달리 본질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남아 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반환’도,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평화국가가 된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오키나와 주민투쟁과 미일안보조약 개정

초기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에서 오키나와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군사적으로 지배한 것은 일본의 비무장화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재군비가 시작되고 미군이 일본의 전국토를 군사기지로 만들 수 있게 된 단계에서도 오키나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오키나와에서 ‘총검과 불도저’에 의한 미 군용지의 강제접수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군은 군용지로 쓸 필요가 없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사람들이 원래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했다. 그러나 미군의 군용지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귀환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오키나와 점령 초기 미군은 헤이그 육전법규에 근거하여, 일본이 독립할 때까지 전쟁상태가 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사용료조차 지불하지 않았다. 미군은 군사적으로 점령한 지역에서 항구적인 군사기지 건설을 시작하였다. 1952년 11월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된 직후에야 군용지임대차계약을 위한 포령91호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91호는 임대기간을 20년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하였고, 한 평의 임대료가 “코카콜라 한 병 값도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낮았다. 90% 이상의 군용지 지주가 계약을 거부했으나 미국의 오키나와 민정부는 1953년 포고26호를 공포하여, “(45년부터) 장기간에 걸친 사용 사실에 의해 (군용지주들이 토지 임대에 동의한다는) ‘묵계(黙契)’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밀어붙였다.

7) 신탁통치 지역에 대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행사하는 권한(네이버 국어사전). 행정 및 통치권을 의미한다. 오키나와의 경우, 주권은 일본에 넘어갔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묘한 형태로 남게 되었다.

오키나와 기지건설 과정에서 미군은 농민들의 완강한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무장한 군인을 동원했다. 미군의 ‘총검과 불도저’를 앞세운 토지 점수에 농민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했다. 특히 이에지마 농민들은 ‘진정규정(陳情規定: 행정기관에 출두하여 진정하고 호소하는 행위)’ 방식의 비폭력주의를 결정하고, 오키나와 전체를 ‘거지행각’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미군의 폭력적인 토지 탈취의 부당성을 알렸다.

1956년 6월 미하원군사특별분과위원회 보고서, 이른바 ‘프라이스 권고(Price Report)’가 발표되었다. 프라이스 권고는 오키나와 기지가 ‘①제약이 없는 핵기지로서, ②아시아 각국의 지역적 분쟁에 대처하는 미 전략의 거점으로서, ③일본이나 필리핀의 친미정권이 무너질 경우의 보루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군용지 정책을 포함한 당시까지의 미군지배 방식을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이 권고 내용이 알려지자 오키나와에서는 거대한 민중운동의 물결이 넘실댔다. 권고 전문이 알려진 1956년 6월 20일 오키나와 전체 64개 시·정·촌 가운데 56개 지역에서 일제히 시·정·촌 주민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 전체 인구의 20~40%인 16만에서 40만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폭발적인 ‘섬 전체 투쟁’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균열이 일어났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탈하기 시작했으며, 혁신세력 내부에서 분열과 주도권 싸움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군의 군용지 사용료 대폭 인상으로 투쟁의 기세가 꺾이고 말았다.

‘섬 전체 투쟁’은 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끝났지만, 민중은 투쟁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노동조합과 인권단체, 평화단체가 결성되었고, 1960년 4월 28일에는 60년대 오키나와 민중운동의 모체가 된 오키나와현조국복귀협의회(이하 복귀협)가 조직되었다. 오키나와의 투쟁은 일본 본토에도 영향을 미쳐 미군기지 확장 문제나 미군범죄를 둘러싼 재판권 문제가 부각되었다. 1950년대 중반, 일본에서는 미군기지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감정이 고양되면서 반미감정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투쟁에 공감했던 일본인들 대부분은 미일안보조약 아래 있는 일본과 대일평화조약 제3조 아래 있는 오키나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의 전 국토에 군사기지를 둘 수 있는 권리를 미국에 부여하고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제약 아래서 군용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일본 헌법은 전쟁포기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후의 토지수용법은 군사적 목적에 의한 토지의 강제수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안보조약의 발효와 함께 이른바 ‘미군용지특조법’을 제정해야 했다. 미군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강제수용은 특별토지수용법에 근거하게 되어 있었고, 일본 본토에서는 미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수용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했다.

주일미군의 시설이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보조약에 근거한 형사특별법도 제정되었다. 그런데 1950년대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도쿄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 당시 시위대가 기지 안으로 4미터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1959년 도쿄 지방법원은 “안보조약에 근거한 미군 주둔은 위헌이며, 형사특별법도 무효, 따라서 사건도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결국 10년 이상의 분규 끝에 미군은

도쿄 스나가와 기지의 확장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처럼 일본 본토에서는 국민의 반대 여론이나 다른 법률과 제도 때문에 기지를 자유롭게 건설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서는 ‘포령’이라고 부르는 군의 명령에 의해 문자 그대로 ‘총검과 불도저’에 의한 토지강탈이 가능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서 분리되어 미군 지배 아래 놓이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건설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대규모 투쟁에 대한 동정과 공감이 일본의 민족주의와 자주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의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키나와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찾지 못했다. 그것은 오히려 미일 정부에 의해 안보조약 개정으로 교묘하게 악용되었다.

1957년 6월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과 기시 노무스케(岸信介) 일본 수상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에 있는 모든 지상전투부대를 철수시키기로 약속했다. 이는 도쿄에 있던 미 극동군사령부를 폐지하고 극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하와이에 있는 미 태평양군에 통합하는 전사전략 재편성의 일환이었으나 일본 국민의 반미감정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철수한 지상 전투부대, 특히 해병대는 어디로 갔을까? 이것들은 모두 일본 본토가 아닌 오키나와로 옮겨갔다.

1952년의 안보조약 성립에서부터 1960년 조약 개정 때까지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는 4분의 1로 감소되었지만 같은 시기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약 2배로 늘어났다. 캠프 슈와, 캠프 한센, 북부훈련장 등 오키나와섬 북부의 해병대기지는 대부분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에 걸쳐 만들어졌다. 그 결과 1960년대 오키나와에는 일본 본토와 거의 같은 규모의 미군기지가 존재하게 되었다. 일본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 99.4%에 해당하는 본토와 같은 규모의 기지가 있었던 것이다. 기지밀도로 따지면 오키나와는 본토의 100배나 되었다. 오키나와 전체가 미국의 군사기지가 된 것이다.

베트남 전쟁과 대중운동의 발전, 그리고 복귀

오키나와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도 전진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1965년 2월 통킹만 사건을 조작한 미국은 베트남전에 전면 개입했다. 미군의 베트남전 개입은 북폭(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동시에 대규모의 지상전투병력을 남베트남에 파견했다. 베트남에 대한 북폭이 시작되면서 오키나와의 주요 도로들은 군수물자와 군인을 가득 싣고 항구로 향하는 군용 트럭과 전차로 넘쳐났다. 공군기지에서는 연일 수송기와 전투폭격기가 베트남을 향해 출격했다.

요코스카, 이와쿠니, 사세보 등 일본 본토에 주둔하고 있던 주일미군도 베트남으로 출동했지만 이들 주일미군은 오키나와를 경유함으로써 일본과의 사전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되었다. 오키나와로의 이동은 전투작전행동이 아니었고, 오키나와에서 베트남으로의 출격은 오키나와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지역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이후,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 밖에 놓여 있었던 오키나와의 역할 중 하나는 주일미군의 자유로운 군사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오키나와는 미일 안보체제를 바깥에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미국은 절정기에 한국전쟁 당시를 능가하는 55만 명의 군인을 투입하고 무차별적인 공중폭격과 함께 게릴라의 수송로를 밝혀낸다는 명분으로 고엽제를 대량 살포하는 등 화학전까지 폄했지만 군사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의 명분을 잃은 베트남전 개입은 국제적 비난과 고립을 불러왔으며 내부적으로도 반전·평화운동의 거센 도전에 맞닥뜨려야 했다. 결국 1973년 3월 미군은 남베트남에서 철수하였고, 1975년 4월 베트남은 통일되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5만 명의 전사자를 냈으며 100만 명 이상의 베트남 인민을 살해했으며, 베트남 전 국토를 황폐화시켰다.

미국의 베트남 정책이 파탄나면서 미국의 오키나와 지배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반면 오키나와의 대중운동은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크게 발전했다. 베트남 전쟁 전까지 오키나와 대중운동의 기본 목표는 일본으로의 복귀였지만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운동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했다. 베트남 전쟁을 위한 군사기지로 사용됨으로써 베트남 민중에게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싹트며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 때문에 복귀 운동의 구호도 ‘평화헌법 아래로의 복귀’에서 ‘반전 복귀’로 바뀌어 갔다.

1960년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 정부 또한 오키나와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60년대 중반부터 일본 정치권에서도 오키나와 반환 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오키나와에서는 1951년 이래 복귀운동 흐름이 형성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서면 본토에서도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졌으며 반환운동이 크게 성장했다. 1965년 8월 일본 수상으로서 처음으로 오키나와를 방문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는 “오키나와의 조국복귀가 실현되지 않는 한, 일본의 전후는 끝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미일안보체제의 물리적 기반이었기 때문에 오키나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안보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 안보체제의 물리적 기반인 기지 문제는 손을 대지 않으면서 오키나와를 일본으로 귀속시키는 문제, 즉 주권회복 문제로 한정시키려 했다. 미일 두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전후 민족주의를 활용하였다. 즉 경제대국이 된 일본이 오키나와의 반환이라는 주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본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는 일본 내셔널리즘의 환상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오키나와 문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배경에 이러한 일본민족주의의 환상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69년 11월 미국을 방문한 사토 수상은 닉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972년 중에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겠다는 합의를 받아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

8) 1960년에 개정된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서 규정한 “일본의 시정(施政)하에 있는 영역”을 말한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미군의 점령지였던 것이다.

일군사동맹 체제의 재편·강화의 일환에 불과했다. 양국 정상은 오키나와를 ‘본토수준으로 핵 없이’ 반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만 미일공동성명에서는 한국의 안전과 대만해협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과 한 몸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는 유사시에 한반도나 대만해협에서 주일미군의 전투작전행동을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써 동아시아 안보에 대해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던 일본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미일 양국은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는 대신에 주일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와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확대시키려 했다.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는 일본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그날 도쿄에서 열린 복귀기념식에는 오키나와에서 새로 선출된 7명의 국회의원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복귀조건에 항의하기 위해 비판집회장인 요기(與儀) 공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오키나와인들은 무력지배로부터의 해방, 비옥한 토지의 반환, 그리고 기지 없는 평화로운 섬이라는 오래된 이상을 회복할 수 있는 복귀를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를 완전히 배반했다.

미일 정부는 오키나와의 반환과 관련해 ‘핵 없이 본토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핵 반입과 관련해 사전협의를 할 때 일본이 항상 ‘예스’라고 대답할 것을 보증해줄기를 바랐다. 일본은 키신저 미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협의하여 핵 반입에 관한 비밀합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사토 수상과 닉슨 대통령이 이에 서명했다. 일본 국회에서 오키나와 미군의 핵 모의투하훈련 사실이 문제가 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모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핵모의폭탄투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본토수준’이라는 부분이다. 오키나와에서는 적어도 이 ‘본토수준’이라는 말을 미군기지의 규모를 적어도 본토수준으로 줄이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일본 정부의 내심은 오키나와에 자위대를 ‘본토수준’으로 배치하는 데에 있었다. 결국 일본에 반환된 다음에도 미군기지는 축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본토의 미 해병대가 재배치되면서 실탄포격훈련 등이 실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반환 당시 오키나와에는 2만 7850헥타르의 미군기지(전용시설)가 존재했는데, 이는 오키나와 현 면적의 12%를 웃돌고 오키나와 섬 면적의 22%를 넘는 것이었다.

미군기지를 위한 강제수용 상황도 바뀌지 않았다. 포령·포고와 마찬가지로 공용지법에 의해 토지의 강제사용이 계속되었다. 군용지대가 대폭 인상되자 지주와 나머지 주민 사이의 분열이 발생하며 오키나와 사회의 내부 모순과 대립이 격화됐다. 미군 훈련에 의한 사고나 미군범죄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던 반면에 기지 합리화에 따른 기지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진행되었다. 달러가 급락하는 가운데 미국 달러에서 일본 엔으로의 통화 전환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본 자위대 6,400명이 오키나와 섬에 배치되었으며, 일본으로의 복귀와 함께 일본 국민으로서의 질서와 의무도 요구되었다. 미군지배 시기에도 민중의 권리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60년대 말부터 민중투쟁이 고양되면서 미국은 거의 강권을 발동하

지 않았다. 60년대 말부터 복귀에 이르는 시기에 오키나와 민중이 가장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지만 일본으로 복귀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질적인 일본적 질서의 틀이 작용하게 되었다.

냉전 이후 오키나와 주민투쟁의 발전

1980년대 미일관계는 안보보다는 경제적 마찰을 둘러싸고 상호 이해를 조정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오키나와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던 미일관계가 동서냉전의 종언, 소련과 동구사회주의의 붕괴라는 세계사적인 사건과 함께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동서냉전의 종언은 오키나와에서 미군기지의 정리·축소·철거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일본 정부 주변에서도 미국과의 일방적인 안보 대신에 다국간 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오히려 미국은 패권적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1990년 8월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미국의 걸프전쟁은 그 첫걸음이었다. 일본은 이 전쟁에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미국으로부터 군사지원, 곧 해외파병이라는 구체적인 전쟁협력이 없었다면서 홀대를 받아야 했다. 이를 계기로 동서냉전을 전제로 하던 미일안보체제도 새롭게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안보 재정의’로 불렀다. 일본 영토에 대한 공격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명분 아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질서유지와 관련하여 미국에 일본이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안보가 재정의 되었다. 일본의 안보와 미일동맹의 현재적 적대세력은 핵무장을 지향하는 북한이고, 잠재적 적대세력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대국화를 향해 나아가는 중국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길이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으로의 복귀를 통해 전쟁과 점령으로 얼룩진 군사주의의 섬, 군사기지의 섬을 일본 헌법에 보장된 평화 중심의 섬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복귀 후에도 오키나와는 여전히 미군의 군사적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 냉전 시기 오키나와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미군의 세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작동하였다.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냉전 질서가 와해된 다음에도 오키나와는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을 투여하는 요새로 남았다. 1972년 복귀 이후에도, 1990년대의 냉전 종식 이후에도 오키나와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헌장은 ‘평화’헌법이 아니라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였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복귀에 대한 희망은 실망으로, 실망은 다시 분노로 바뀌어 갔다.

일본으로의 반환 후에도 계속되는 오키나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에 대한 반감이 쌓여가고 있을 때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1995년 9월 4일,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 해병 3명이 12살의 초등학생을 감금,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정확히 40년 전인 1955년 9월에 발생한 ‘유미코짱 사건’의 충격을 재현한 것 같았다. 동시에 이 사건으로 오키나와 전투와 전후 역사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일본으로의 반환 후에도 미군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 오키나와 현 경찰이 정리한 복귀 후 23년 동안의 미군범죄 검거 건수는 4,790건에 이르렀다. 살인 12건, 강도 355건, 부녀자 폭행 31건 등 강력범죄만 해도 수백 건에 이르렀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었다. 미군범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오키나와 현 의회를 비롯하여 각종 시민단체들이 미일당국에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현 의회의 항의만 해도 이때까지 125회에 달했다.

시대 상황도 바뀌었다. 어린이의 인권과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대중의 분노가 봇물처럼 터졌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8만 5천여 명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현민 집회를 열고 미군기지 철거를 요구했다. 일본 각지의 지방의회들은 미군기지협정 개정, 기지 사용면적 축소 등을 제기했다. 일본 각지에서도 반미집회가 이어졌다. 결국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하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기소 전에 일본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의 미·일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이 사건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 병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규탄을 넘어 기지연장 반대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이 무렵 마침 기노완(普天間) 비행장을 비롯한 몇몇 기지들의 강제사용 수속 갱신기간이 되었다. 토지소유자가 강제수용수속에 필요한 토지조서·물건조서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 토지소재지의 시장·촌장이 대리서명을, 시장·촌장이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현지사가 대리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하(那覇) 시장과 오키나와 시장, 요미탄(讀谷) 촌장 등이 대리서명을 거부함으로써 대리서명 수속은 오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 오키나와 현지사에게로 넘어갔다. 대리서명을 두고 머뭇거리던 오오타 지사는 민중의 분노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지위협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1995년 9월 28일 오오타 지사는 대리서명 거부방침을 밝혔다. 그는 “젊은이들이 21세기를 꿈꿀 수 있는 오키나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립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기지를 철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보도기관의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리서명 거부에 대한 지지는 75%에서 90%에 달했다. 여중생 폭행사건과 대리서명 거부는 일본 전국에 보도되었고, 양심적인 일본 국민들의 관심을 오키나와로 집중하게 만들었다.

1996년 1월 9일 오키나와 현은 국제도시 형성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현 당국과 시·정·촌 사이의 연락협의회를 발족시켰다. 1월 30일에는 기지반환 행동 프로그램과 국제도시 형성 구상 방안을 제출했다. 오키나와 현은 미국과 일본 정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구체적인 기지의 정리·축소를 요구했다. 그 사이 정권은 무라야마

9) 1995년 9월 4일 이시카와 시에 사는 6살의 여자 아이 유미코가 미군 병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 이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인한 성폭행 및 살인이었다는 점에서 오키나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미군의 폭력적 토지접수에 반대하여 ‘섬 전체 투쟁’이 폭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미군 범죄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었으며, 40년 뒤 소녀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이 환기되었다.

내각에서 하시모토 내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군용지의 강제사용수속은 중지되었다. 중앙정부 수상 무라야마 도미이치는 지사에게 대리서명을 명령했다. 그러나 오키나와 지사가 대리서명을 거부하자 정부는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나하시부에 지사를 상대로 직무집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1996년 3월 25일 후쿠오카 고등재판소 나하시부는 지사에게 대리서명을 명령했다. 지사가 이 명령을 거부하자 3월 29일 하시모토 류타로 수상이 대리서명을 했다. 이렇게 해서 미군용지의 강제사용 수속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오키나와 민중은 많은 교훈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오키나와 투쟁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

하시모토 수상의 대리서명 이후 일본 중앙정부와 오키나와 현 정부의 기지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계속되었다. 중앙정부의 방침에 현 정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재판소에서 패배하자 최고재판소에 상고하면서 법정투쟁을 이어갔다. 1996년 4월 12일, 하시모토 수상은 미일 양국이 후텐마 기지의 전면반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군사기능의 유지·강화를 의미했으며 기지의 정리·축소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군사협력을 추구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저항수단이 된 미군용지특조법을 1997년과 1999년 두 번에 걸쳐 개정함으로써 저항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개정내용의 핵심은 강제사용 내지 수용대상지의 토지조서·물건조서에 대한 대리서명과 관련 서류의 공고·열람(대행)수속을 시·정·촌장이나 지사에게서 거둬들여서 총리대신의 업무로 정한 것이다. 이로써 미군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총리대신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정부는 오키나와 민중운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키나와에 관한 미일특별 행동위원회(SACO)’를 설립하여 후텐마기지를 포함한 오키나와 소재 미군기지의 정리·통합·축소안을 내세우면서 주민의 반발을 잠재우려 했다. 그러나 후텐마 기지 반환을 근간으로 하는 오키나와 소재 미군기지의 재편 시도는 미일 양국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후텐마 기지 반환이 오키나와 현내에 그 대체시설을 건설한다는 조건을 담고 있었고, 미군기지 면적의 20% 정도를 축소하는 내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키나와 소재 미군기지의 통합·강화 정책이었던 탓이다. 이러한 허울 좋은 기지 재편 방침은 결국 오키나와에 대한 차별을 부각시킴으로써 민중운동의 저항을 불러왔고 오키나와 여론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켰다.

후텐마 기지 이전을 두고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와 미국은 2005년 10월 헤노코 연안에 공항 등 기지를 건설하는 주일미군 재편안을 다시 마련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거부된 안이었다. 이나미네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에 반발해 미 해병대의 현외 이주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기지이전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

체가 이뤄졌다.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정권 교체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그해 3월에는 아베 수상의 '위안부' 발언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문부과학성이 오키나와 전투의 '집단지결'에 관한 일본군의 관여를 삭제하는 교과서 검정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오키나와 전체가 반격체제를 재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권교체 전까지 민주당은 일관되게 오키나와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 由紀夫) 대표는 후텐마 기지가 옮겨갈 곳은 '국외, 최악의 경우이라도 현외'라는 입장이었고, 2008년에 작성된 민주당의 '오키나와 비전'에도 이런 내용이 명시되었다. 오카다 카쓰야 간사장도 2009년 총선 직전 <세카이(世界)>지(7월호)에 발표한 글에서 동일한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2009년 9월의 정권교체 후 약 1개월만에 민주당의 입장이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다. 일본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으로부터 "현행안이야말로 최선"이라는 질책을 들은 다음, 민주당 정권이 바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당시 오카다 카쓰야 외상은 "선거공약집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당의 공약이 아니다"라는 변명 같지도 않은 구차한 말까지 하면서 케케묵은 과거의 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나 일본의 정권교체는 이미 교과서 검정문제가 발생한 무렵부터 들끓기 시작한 오키나와의 여론을 더욱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2009년 총선에서 오키나와의 4개 선거구에서 자민·공명 연합이 전멸하고 민주당과 공산당 등 야당이 석권했다. 이렇게 되자 이때까지 현내이설 용인을 주장했던 자민당과 공명당의 오키나와현 지부도 '현외 이설'로 180도 전환했다. 2010년 1월의 나고 시장선거에서는 사민당·사회대중당·공산당·민주당이 미는 정치신인 이나미네 스스무가 당선되었다. 2월에는 오키나와 현의회가 전원일치로 '미군 후텐마 비행장의 조기폐쇄·반환과 현내 이설에 반대하며 국외·현외로의 이설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4월 25일에는 9만 명이 집결한 가운데 현민대회가 열렸다.

그러나 민주당의 하토야마 수상은 섬 전체가 하나로 뭉친 오키나와의 여론을 버팀목 삼아 미국에 맞서지 않고, 내각 안팎의 포위망에 굴복해 5월 28일 자민·공명당 정권이 2006년에 합의한 내용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자멸적 사태가 끝난 뒤인 6월 2일 하토야마는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5.28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 칸 나오토(菅 直人) 정권이 발족했다. 하토야마 정권이 붕괴한 것은 민주당 내 대미추종파가 쿠데타를 일으킨 때문이었다.

칸 나오토 정권은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이전하는 과거의 안으로 회귀하며 미일동맹 우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음의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 정권도 동일한 입장을 보여 오키나와 사람들과 대립했다. 2012년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해 5년 3개월만에 민주당은 정권을 내주어야 했다. 새로 권력을 장악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 晋三) 극우정권은 미일동맹 강화를 더욱 선명하게 내세우며 기존의 헤노코 이전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후텐마 투쟁은 계속되었다. 2014년 11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

에서 오키나와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은 ‘오키나와 기지 반대’라는 이슈 아래 단결해 ‘올 오키나와’(하나의 오키나와) 깃발을 내걸고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지사를 당선시켰다. 오나가 지사는 취임 3개월 뒤 방위성의 오키나와방위국에 ‘헤노코 기지 건설을 위한 지층 조사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15년 5월 오나가 지사는 미국 워싱턴을 방문, 국무성 고위관리 등을 만나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0월 13일 오나가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헤노코 해안 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항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상당기간을 소요하며 진행되었고, 2023년 9월 4일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은 일본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오키나와 현지사가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을 위한 매립 허가 취소 신청을 정부가 시정하라고 지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한겨레 2023.9.5.)

한편, 2016년 5월 19일 오키나와 주둔 미군 군무원이 현지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으로 주민들의 분노가 다시 끓어올랐다. 6만 명의 오키나와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미군기지 철폐를 외쳤다. 1995년 미 해병 3명의 12세 여중생을 성폭행 사건 후 21년만에 유사한 사건이 재현된 것이다. 주민의 여론이 비등해지자 미군은 소속 부대원들에게 야간 외출금지령을 내렸다. 오키나와현 의회는 미군철수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오키나와의 투쟁은 지금도 계속 중이다. 언제 오키나와의 투쟁은 끝날 수 있을까? 오키나와 문제는 미군기지가 오키나와에서 떠나면 끝나는 것일까?

오키나와 투쟁과 동아시아 평화

1996년 클린턴 미 대통령과 하시모토 일본 수상의 미일안보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냉전 이후 이른바 ‘미일안보체제의 재정 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일본은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일본 주변사태에 대처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을 정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다양한 유사입법들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1999년 주변사태법, 2003년 무력공격사태대처법, 2004년 국민보호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와 함께 일본 자위대의 활동 무대 또한 넓어져 갔다.

그리고 2014년 7월, 마침내 아베 정권은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의 ‘안보 재정 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평화헌법을 포기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서는 첫 조치라고 할 수 있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2015년 4월, 제1단계 후속조치로 대미안보협력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9월에는 제2단계로 안보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9월에 제·개정된 11개 법률 가운데 <무력공격사태법>은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거로부터 뒤집

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아베 정권이 2014년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기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방지원을 상정한 기존의 <주변사태법>을 대체한 <중요영향사태법>은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도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었고, 후방지원 활동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넓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들은 국내외에서 심각한 논쟁을 불러왔다.

우선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킨 ‘패전국’으로서 평화헌법이라는 특수 체제를 택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가는 ‘중대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이는 동북아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요인이 아닐 수 없었다. 중국의 부상과 미일동맹 강화로 대응하는 것으로써 중국 대 미·일의 대립구도가 더욱 선명해졌고, 동아시아의 군비경쟁도 격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자기편으로 끌어당기려는 중국과 한미일 공조로 중국에 대항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일본의 대미 후방지원 내용이 확대됨으로써 유사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북한을 염두에 둔 군사 활동과 한반도 진출이 예견되었다. 아베 수상은 “법률상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국에 한국은 배제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한반도 주변에 자위대를 파견할 경우, 사전에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고, 미국도 ‘국제법상 인정된 권리’라면서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자위대(일본군)는 한국의 찬반 의견과 상관없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한반도와 그 주변 사태에 개입하겠다는 이야기다. 청일전쟁을 앞두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일본 국내적으로는 법의 위헌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이 법안에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국회에 출석한 3명의 헌법학자 모두 위헌이라고 답변했다. 안보법제는 전력(戰力)의 보유와 무력의 행사를 금지한 일본 헌법 제9조에 위배되며 일본이 스스로 내세운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도 어긋났다. 그러나 이 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의 안정적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아베 정권은 위헌 논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아베 정권의 최종 목표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군대 보유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를 두고 ‘보통국가화’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쟁국가’로 가는 길이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 한 번도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제대로 된 배상을 하지 않았다. 한국과 대만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침략에 과정에서 아시아 인민에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자신 위에 군림하는 미국에만 굴종하고 아부하는 태도를 보일 뿐 나머지 아시아 국가와 민중에 대해서는 반성은커녕 모독으로 일관했다. 그런 나라가 다시 무장을 하고 군대를 보유하고 유사사태란 이름으로 이웃 나라의 분쟁에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시아 민중과 국가들은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과거 침략 행위를 재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국가가 되는 밑바탕에는 중국의 급부상과 그에 대항하는 미일동맹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자신과 대적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일동맹이란 이름으로 일본의 재무장과 군비확장을 부추기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하위동맹자가 되어 또 다시 과거의 패권을 회복하려는 미몽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고, 이명박·박근혜·윤석열의 보수 친미·친일정권은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여기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결국 일본의 군사국가화를 뒷받침하는 것이 미일동맹이고, 오키나와는 미일동맹을 상징하는 위치에 있다. 오키나와는 자신뿐만 아니라 일본, 나아가 전체 아시아의 평화와 관련된 핵심 고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오키나와의 투쟁은 오키나와인들의 차별 철폐투쟁이고 평화와 행복을 위한 투쟁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한 부분이다.

오키나와, 제주도,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

태평양 동중국해 남동쪽에 위치한 류큐는 중국과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사이에서 해상무역을 통해 오랫동안 독립왕국으로 번성을 누렸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하기 위해 일으킨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군량미 제공 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도쿠가와 막부 시절 쓰시마번의 침공을 받았으나 그래도 독립성은 유지할 수 있었다. 중국과 일본에 동시에 조공하면서 번성을 누린 류큐왕국은 19세기 후반 일본의 침공을 받아 강제 합병되면서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되었다.

일본제국주의는 다른 역사와 문화, 언어를 가진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일본제국의 신민이 될 것을 강요했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이 오키나와를 본토 사수를 위한 사석으로 이용하면서부터 오키나와인의 시련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 전투에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총동원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 전투를 오키나와인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미군의 본토 공격을 지연시키고 '천황제'를 지키기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생각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인을 미군에 대한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집단자살을 강요하고 스파이 혐의로 학살했다.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명이 살해되는 참화를 겪어야 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분리되어 미국의 군사적 점령 아래 들어갔다. 비옥한 땅은 미군의 군사기지로 강제 징발되었고, 저항하는 농민들 앞에

는 ‘총검과 불도저’를 앞세운 강제집행이 기다렸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가 떠안아야 할 부담을 대신 떠맡은 희생자였다. 평화국가 일본은 전쟁국가 오키나와의 희생 위에서 가능했다. 그런 구조는 1957년에 완성되었다.

1947년 4월 미군은 극동군사령부를 해체하고 하와이에 태평양지구사령부를 설치했다. 7월에는 도쿄의 유엔사령부가 서울로 이동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 무렵 미군기지 주변에서 폭력과 성범죄로 반미감정이 증가하자 일본 본토에서 철수한 미 지상군 부대, 특히 해병대가 오키나와로 옮겨갔다. 이로써 일본 본토의 미군 기지는 1/4로 감소했으나 오키나와 기지는 2배로 증가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 일본 내의 미군시설의 76%, 주일미군의 65%가 배치되는, 그래서 일본 본토에 비해 기지밀도에서 100배나 되는 기막힌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 같은 오키나와에 대한 차별을 바탕으로 구축된 미일 안보체제의 기본틀은 그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냉전시대 오키나와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군사기지였다. 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오키나와는 군사기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본토의 주일미군들도 오키나와를 거쳐 베트남으로 이동함으로써 일본과의 사전협의 없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었다. 오키나와인들은 60년대 기지반대투쟁 과정에서 베트남인들과의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1972년 미국에서 일본으로 반환된 뒤에도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없어지지 않았다. 오키나와는 여전히 일본 본토가 떠맡아야 할 군사기지를 대신 맡은 희생자였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말기 오키나와 전투에서 저지른 오키나와인에 대한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사죄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역사적 사실까지 감추며 왜곡하고 있다.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난 뒤에도 오키나와의 희생은 끝나지 않고 있다. 냉전이 끝난 뒤에도 미국은 세계유일의 패권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점차 경제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세계 전체를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통해 패권을 유지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정책을 택했다. 미일동맹 강화와 미일안보재조정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을 확장함으로써 미군 전력의 공백을 메우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일동맹 강화와 안보재조정 과정에서 오키나와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오키나와는 광과 더불어 여전히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미군의 핵심 전력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미국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축소, 통합, 재편, 강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오키나와인들의 기지반환운동과 충돌하게 되었다. 특히 1995년 3명의 미 해병에 의한 12세 여학생의 강간 사건을 계기로 오키나와인들의 투쟁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끈질긴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일안보협력의 희생자가 된 오키나와의 모습을 부각시

켰으며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 등 동아시아의 평화운동세력과의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키나와인들의 투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들의 투쟁은 기지 이전 차원을 넘어 평화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도 오키나와인들의 아픔과 투쟁에 공감과 연대를 보내야 할 위치에 있다.

미국은 미일 군사동맹체제에 남한을 끌어들여 대 중국 견제의 하위파트너로 삼으려 한다. 한국은 특히 근대 이후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과정에서 희생자가 된 경험이 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 등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한 전쟁에서 한반도는 전쟁터가 되어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 때문에 오키나와인의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역사적으로 오키나와와 유사한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고통과 피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2차 대전 후 미군정 점령 기간 오키나와에서 기지건설을 위한 토지 강탈과 수탈이 있었다. 미군정 기간 동안 제주도에 학살이 벌어졌다. 제주4.3사건에 적용된 미군정교범은 미군이 오키나와를 점령하면서 완성되었다. 이 군정교범은 놀랍게도 21세기에 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결국 오키나와와 제주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가 하나의 매개로 연결되고 있다.

지금 동아시아는 점차 위험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일과 중국이 충돌하고 있고,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남북, 북미, 북일이 충돌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남한에 사드 배치가 결정됨으로써 중국과 한미가 충돌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한반도가 국제적인 위험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키나와인들의 투쟁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오키나와와 제주도, 한반도, 동아시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오키나와와 제주도의 투쟁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나아가 지원과 연대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 김인영, “비운의 오키나와 역사 (상.하)”, <공감신문> 2016. 5. 27/ 5.28
- 정영신, 「오키나와(沖繩)의 기지화·군사화에 관한 연구 - 기지의 건설·확장과 반환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통권 제73집(2007. 03)
- 개번 맥코맥, 다무라 후미노리, 「400년의 류큐·오키나와와 동중국해 기지문제의 현재」, 『아시아리뷰』 제5권 제2호(2016. 2)
- 유영자, “생명의 숨결을 남기고 싶다”, <한겨레21> 제118호(2016. 6. 28)
- 전계완, “미·일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정학적 요충지’ 오키나와의 분노”, <신동아> 2016년 5월호
- 콘도 다이ске, “일본 오키나와, 동아시아의 새 화약고 되나? :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70년 미일 안전보장체제 ‘흔들’”, <월간중앙> 201506호(2015. 05. 17)
- 이진우, ‘오키나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진실의 길>, 2014. 9. 1
- 손지연, “오키나와 전투와 제주 4.3사건을 둘러싼 기억투쟁 - 오시로 다쓰히로 『신의 섬』과 현기영의 『순이 삼촌』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41권(2015)
-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한승동 옮김, 『희생의 시스템』, 돌베개, 2013
- 오에 겐자부로 지음/ 이애숙 옮김, 『오키나와 노트』, 삼천리, 2012
- 아라사키 모리테루 지음/ 백영서·이한결 옮김, 『오키나와,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 창비, 2013
- 도미야마 이치로 지음/ 심정명 옮김, 『유착의 사상』, 글항아리, 2015
- 정근식·주은우·김백영 편저, 『경계의 섬, 오키나와 기억과 정체성』 논형, 2008
- 개번 맥코맥·노리마쯔 사토꼬 지음/ 정영신 옮김, 『저항하는 섬, 오키나와』, 창비, 2014
- 아라사키 모리테루 지음/ 정영신·미야우치 아키오 옮김, 『오키나와 현대사』, 논형, 2008
- 서승 지음, 『서승의 동아시아 평화기행』, 창비, 2011
- 서승 지음, 『평화로 가는 한국, 제국으로 가는 일본-동아시아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한다』, 경향신문사, 2019
- 메도루마 슌 지음/ 안행순 옮김, 『오키나와의 눈물』, 논형, 2013
- 이시우 사진·글, 『제주 오키나와 평화기행』, 도서출판 말, 2014